

초소자화(超少子化)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본적 방향과 대책

강 란 혜(충신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본 연구는 일본의 초소자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일본의 소자화(출생률 감소)는 원래 인구학의 전문 용어가 아니고, 경제기획청 『국민 생활백서』(1992년 판)의 부제 「저출산 사회의 도래(到來), 그 영향과 대책」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오늘날 인구학 연구자의 사이에도 널리 이용할 수 있게 된 「소자화」의 단어는, 인구학적으로는, 단지 출생력 저하에 머무르지 않고, 인구치환 수준을 밑도는 저출생력(below-replacement fertility)을 의미한다(大淵寬, 2005).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출생률은 낮아지면서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의 활력상실, 의료비 급등에 따른 정부재정 부담의 과중화와 경제 활동인구보다 부양해야 할 인구가 많아져 젊은 세대와 고령세대간의 갈등표출로 확장됨으로써 전반적인 사회적 동력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합계 특수출생률(total fertility rate, TFR)이 약 2.1의 수준이다. 출생률 감소는 오늘 선진국공통의 현상이 되고 있지만, 출생율의 수준에는 상당히 차이를 보여 출생력이 인구치환 수준을 조금 밑도는 정도(합계 특수출생율이 1.5~2.1)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크게 밑도는(합계 특수출생률이 1.5미만)나라도 있다. 합계 특수출생률이 1.5을 밑돌 경우, 문자 그대로 대단히 낮은 출생률이라고 하는 의미로 “초소자화(very low fertility)”라 한다(Caldwell and Schindlmayr, 2003).

최근에는 합계 특수출생률이 1.3미만의 출생률 수준에 대해서 “lowest-low fertility”라고 말하고 있다(Kohler et al., 2001, Kohler et al., 2002, Billari and Kohler, 2004).

따라서 소자화, 즉 저출생력(low fertility)의 수준을 표시하는데 3가지 표현 방법이 있다. “below-replacement fertility”(TFR<약 2.1), “very low fertility”(TFR<1.5), 그리고 “lowest-low fertility”(TFR<1.3)이다. 본고에서는 “very low fertility”를 염두에 두고 「초소자화」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在藤, 2008).

I. 초소자화(超少子化)의 출현

1. 일본 출생률의 동향

일본의 출생수와 출생률의 지금까지의 전환을 후생 노동부의 「인구동태통계」에 의하면중전(終戰) 직후의 베이비붐(baby boom)에서는 1년간에 250만명 이상의 사람이 태어났지만, 그 후, 급속한 출생률

저하가 일어났고, 1950년대 중간으로부터 1970년대 전반까지의 사이는, 합계 특수출생률이 거의 안정한 시기가 계속되었다. 그 후, 1970년대 중간으로부터, 합계 특수출생률은 인구치환 수준으로 낮은 출생률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1989년의 합계 특수출생률이, 1.57을 기록하므로 「1.57쇼크」라고 말하여 지면서, 출생률 감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합계 특수 출생률은 그 후도 계속되어 2005년에는 1.26으로 지금까지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했다(在藤, 2008). 2006년엔 일본의 출산율이 1.31로 2002년(1.32) 이후 가장 높았는데 이는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환경 개선으로 1971~74년의 제2차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결혼 및 출산이 늘었기 때문이었다. 2007년 출생률은 1.34 수준으로 재작년에 비해서 0.02%포인트가 올랐다.

후생노동성이 2008년 1월 발표한 인구추이 자료에 따르면 작년 일본 신생아는 109만명으로 전년 대비 3천명 감소했다. 여기에 고령화가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사망자수가 늘어나 인구감소로 이어졌다.

일본의 인구감소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 일본인 인구는 지난 2004년 1억 2,626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7년 6월말 현재 1억 2,608만명으로 무려 18만명이 줄었다. 일본 거주 외국인을 포함할 경우도 2004년 1억 2,778만명에서 올해 6월말 현재 1억 2,775만명으로 오히려 3만명 감소했다. 출생률은 줄어드는 대신 생존기간이 늘어나면서 고령층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는 지난 1950년 4.9%에 불과했으나 2005년 20%를 돌파한 후 지난해는 21.5%를 기록했다. 7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10.0%나 된다. 일본이 가까스로 ‘잃어버린 10년’의 불황에서 탈출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디플레이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인구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제 일본은 「초소자화」 「초고령화」로 인구 감소와 노령층 증가는 일본의 사회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자화의 영향】

- 경제성장의 저하
- 세입감소 · 사회보장부담증가
- 치안 · 방화 · 안전보장문제 등

2. 일본의 출생률 장래의 추이

저출산의 여파는 일본의 기업은 물론 대학 등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구인난에 처한 기업들은 인력수급 상황이 좋은 중국 등을 새 거점으로 삼고 장기고용을 전제로 인사제도를 정비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2030년이면 일본의 노동력 인구(15세 이상의 취업자와 구직자)가 현재보다 1천만명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업계의 해외 노동력 확보 노력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데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력 부족현상이다. 작년말 일본의 실업률은 3.9%로서 지난 10년 중 최저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는 순수한 일자리 증가라기보다는 노동력 부족 현상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 여기에 고령인구 증가도 일본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다. 작년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의 인구추계를 분석

한 결과 2035년에는 시가(滋賀), 아이치(愛知), 오키나와(沖縄)현 등 3곳을 제외한 44곳의 노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또 2035년 전체 인구는 30년 전의 86.6%인 1억1천68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더욱 큰 문제는 저출산에 따라 신생아들은 줄어든 반면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장수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자 부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공적 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이 대표적이다. 현역 세대의 보험료로 고령자 연금을 충당하는 공적연금의 경우 20년 후부터는 연금수령액이 현역 세대 수입의 48%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고령자들은 현역세대의 60%에 육박하는 연금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2008년 2월 26일).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오는 2055년 일본의 인구가 현재보다 30% 줄어든 8,993만 명까지 감소한다고 예측해 충격을 준 바 있다

II. 초소자화의 원인을 둘러싼 환경

기혼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일본 정부 조사에 따르면 첫째 아이를 낳은 이후 회사를 그만두는 여성 회사원 비율이 60%를 넘기고 있다. 이유는 대부분 ‘체력이 받쳐주지 않아서’, ‘근무시간과 보육원에 데리러 가는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등 일과 보육을 함께 하는 데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이다.

출산의 전제인 ‘결혼’을 위한 환경도 그다지 좋지 않다. 이른바 버블 붕괴시기에 학생이었던 ‘단카이 주니어’들은 현재 30대를 넘기고 있다. 이들은 일본 경제 버블 붕괴 이후 사회에 진출한 세대. 당시 급속히 진행된 노동자 파견 규제 완화는 결과적으로 일본에 비정규노동자 및 이른바 ‘워킹 푸어(일하는 빈곤층)’ 증가를 불렀다. 수입이 적은 비정규노동자의 결혼률은 상대적으로 낮다(내일신문, 2008년 6월 9일).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의 2005년 조사에 따르면 30~40세 남성 기혼자 중 정사원이 60% 수준인 반면 계약사원 등 비정규노동자는 30%, 프리터(프리-아르바이트)는 17%에 불과하다. 연봉 수준으로 보면 600만~699만엔인 사람은 79%가 결혼하고 있는 반면 99만~150만엔인 경우는 34%에 머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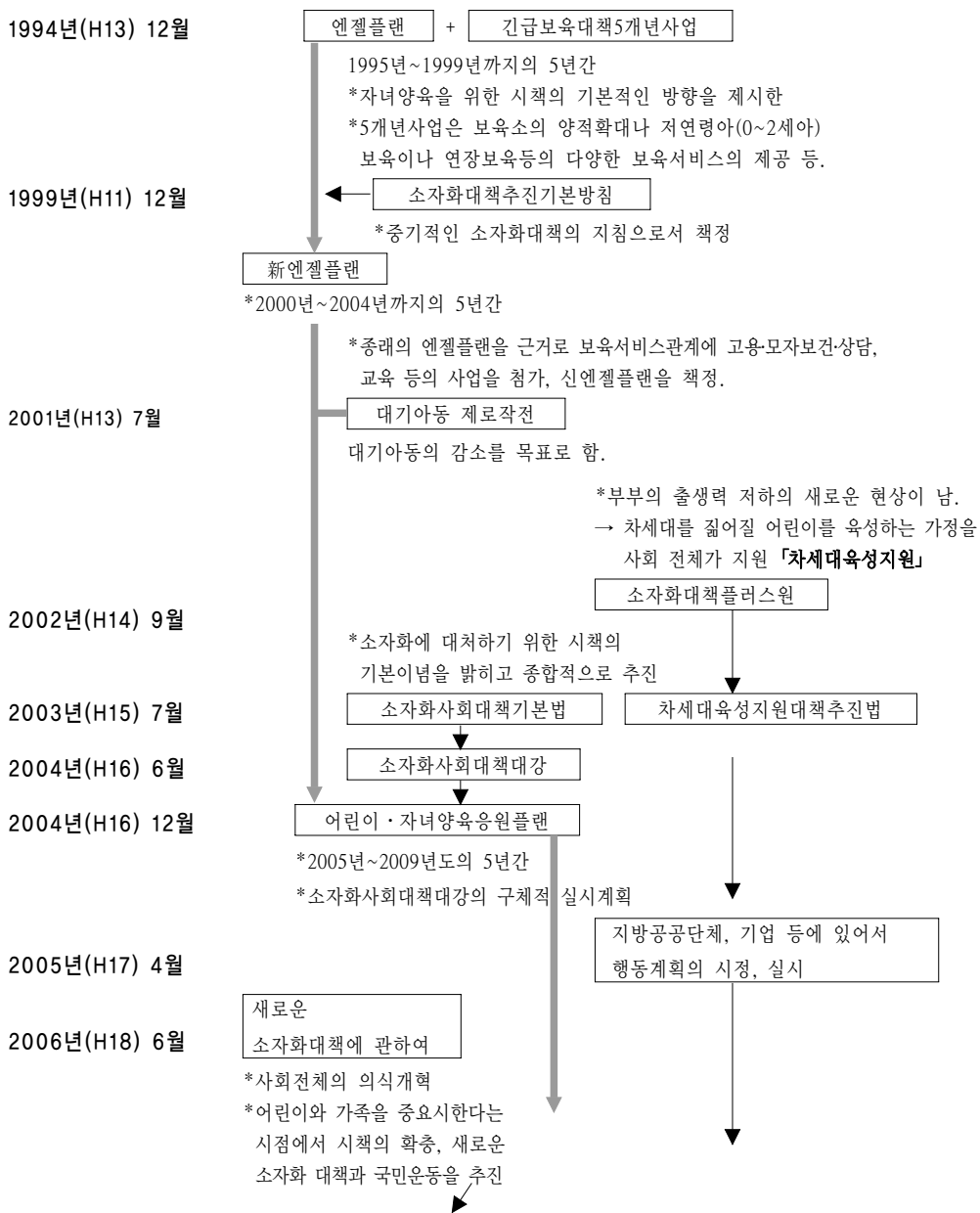
이외에도 출생률이 감소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출생률 감소의 요인】

- ① 결혼·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 ② 미혼화·만혼화
- ③ 부부의 출생력(의욕)의 저하
- ④ 일과 육아 양립의 환경이 불충분
- ⑤ 출산·육아에 대한 경제적·정신적인 부담감
- ⑥ 장래에 대한 불신·불안의 증대

Ⅲ. 금후 일본의 초소자화 대책

정부는 1990년 후반부터 「엔젤플랜」 「신엔젤플랜」에 기초해서 소자녀화 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2003년에는 소자녀화 사회 대책 기본법, 차세대육성지원 대책 추진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도 부터는 소자녀화사회대책대강과 그의 구체적 실시 계획인 어린이, 자녀 응원 플랜에 기초해 소자녀화 대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의 출생률 감소대책의 문제점으로 국민에의 위기감의 호소나 장래 비전의 제시가 불충분하였고 전체의 플랜은 갖추어져 왔지만, 실효성이 부족하였으며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출생률 감소대책 예산규모가 적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일본 정부의 소자화 대책 경과과정을 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일본의 소자화 경과과정

따라서 지금까지의 대책만으로는 저출산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계속되는 출생률 저하와 인구감소가 사회문제로 지적되자 일본정부는 지난해부터 저출산 대책을 마련, 시행중이다. 정부는 첫째 자녀를 출산한 이후 계속 일하는 여성 비율을 현재 38%에서 10년 뒤인 2017년까지 55%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이른바 ‘일이나 출산이나’라는 이자택일 구조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판단, 이에 ‘아이와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이라는 이름으로 저출산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10년짜리 장기계획인 이 전략은 △주6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 비율을 기존 10.8%에서 5%대로 줄이고 △보육서비스를 받는 3세 미만 유아 비율을 20%에서 38%로 늘리는 한편 △첫 아이를 낳은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여성 비율을 38%에서 55%까지 확대토록 지원하고 △남성 육아휴직 취득률을 0.5%에서 1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0.5%에 그친 남자 사무직 종사자의 육아 휴직 이용률을 2017년까지 10% 수준으로 끌어올려 여성의 노동 담당 비율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을 현재의 10.8%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여 보다 많은 노동자에게 노동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정부와 기업은 출산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지는 속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임신중 건강진단 비용 지원이나 육아지원에 적극적인 기업에 세제상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체외수정 불임치료 경비를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미 초등학생의 의료비는 전액 지원하는 지자체가 상당수에 달한다. 기업들도 여사원들이 아이들을 보살피기 위해 좀더 일찍 귀가할 수 있도록 별도 야근 요원을 채용하거나 육아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산 장려에 힘쓰고 있다(연합뉴스, 2008년 2월 26일).

일본의 소자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가지 과제를 들 수 있다. 첫째, 출생률의 향상이고 두 번째, 인구감소 사회의 도래를 위한 준비이다. 이러한 과제하에 소자화를 극복하기 위한 기본 방침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일본 동경상공회의소, 2006).

1) 경제지원의 확충

육아 가정에 있어서의 가계에 차지하는 육아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경제적 제약으로부터 어린이를 가지는 것을 망설이지 않도록 환경정비가 급선무다.

- ① 아동수당의 확충(지급액의 증액, 지급기간의 연장 등)
- ② 아동세액공제(세대단위과세 공제)의 창설
- ③ 어린이의 의료비경감(출산·불임치료에의 건강 보험적용 등)
- ④ 교육비의 경감(고등 교육에의 장학금의 확충 등)
- ⑤ 연금제도에 있어서의 육아의 평가(보험료경감 조치 등)
- ⑥ 자녀양육기의 소득 보장(급여금의 충실)

2) 보육환경의 정비

현재, 일과 육아의 양립 할 수 있는 보육지원 시스템이 여전히 곤란한 상황이다. 보육 시설의 증설이나 보육마마 제도의 확충 등, 일하는 남녀의 요구에 적합한 이용하기 쉬운 유연한 보육 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 육아에 있어서의 심리적인 고립이나 부담감을 경감해 가는 것도 필요하다. 육아에 조력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주위에서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 ① 보육 환경의 정비(다양한 보육 서비스의 정비나 규제 완화 등)
- ② 어린이를 가지는 남녀의 하기 쉬운
- ③ 소아과·산부인과의료의 확충(의사의 양성·확보 등)
- ④ 관민(官民)에 의한 「육아 지원 사이트」의 창설(정보교환·제공)
- ⑤ 지역의 육아 환경정비(지역전체로 육아 가정을
- ⑥ 주택환경의 정비(육아 세대우선의 주택정책의 실시

3) 국민전체의 의식개혁

「어린이를 낳고 키운다」는 가치관을 배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의 핵가족화나 개인 주의화의 풍조 등을 배경으로 「가정의 가치」가 국민의식 속에 저하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만일 「출산·육아를 위한 사회」의 실현을 향해서 경제적 지원이나 사회적인 환경정비가 진행됐다고 한들, 개인의 출산·육아에 관한 의욕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출생률의 회복은 기대할 수 없다. 장래의 「건강한 일본」을 짚어지는 인재를 늘려 키워 가기 위해서도, 학교 교육 등을 통해서 젊은 세대에 가족이나 육아의 중요성이나 즐거움을 전하고, 국민전체가 「어린이를 낳고 키운다」는 가치관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국민전체가 이러한 「어린이를 낳고 키운다」는 가치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어린이의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른도 어린이의 교육의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III. 결론

일본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 경제의 향후 최대 과제는 성장 지속 문제로 저출산 위기를 돌파해 노동력 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지원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과 양육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에서 개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정부가 직, 간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가족친화 정책에 매진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도 여러 가지 방침을 내놓고 있다. 한 예로 스미토모전기공업은 오는 2008년 4월부터 출산과 육아 등으로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하는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고 경제단체 연합회 측은 직장 내 보육원 정비 등 여성이 출산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토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초소자화시대의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대책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도 저출산의 부작용이 국가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안겨주기 전에 우리 정부와 사회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에 나서는 것은 한시가 급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급속한 인구감소는 경제 산업이나 사회보장의 문제는 물론, 국가나 사회의 존립 기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阿藤誠(2005a). 「少子化をめぐる研究の課題と展望」『人口學研究』第37号, pp.1-9.
- 阿藤誠(2005b). 「家族觀の変化と超少子化」, 毎日新聞社人口問題調査會(編)『超少子化時代の家族意識: 第1』.
- 廣嶋清志(2001). 「出生率低下をどのようにとらえるか?: 年齢別有配偶出生率の問題性」『理論と方法』, Vol.30 No.16, pp.163-183.
- 石川晃(2008). 「年齢別離婚・再婚の發生確率: 法律婚に基づく婚姻・離婚のコーホート分析」,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少子化の要因としての離婚・再婚の動向, 背景 および見通しに關する人口學的研究: 第2報告書』(所内研究報告第22号)pp.13-32.
- 金子隆一(2004). 「少子化の人口學的メカニズム」, 大淵寬・高橋重郷(編)『少子化の人口學』(人口學ライブラリー 22—リー1)原書房, pp.15-36.
-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2007b). 『平成17年第13回出生動向基本調査(結婚と出産に關する全國調査)—第I報告書—わが國夫婦の結婚過程と出生力』(調査研究報告資料第 23号).
-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2007c). 『平成17年第13回出生動向基本調査(結婚と出産に關する全國調査)—第II報告書—わが國獨身層の結婚觀と家族觀』調査研究報告資料第 24号).
- 河野稠果(2007). 『人口學への招待: 少子・高齢化はどこまで解明されたか』(中公新書 1910)中央公論新社.
- 目黒依子・西岡八郎編(2004). 『少子化のジェンダー分析』(双書ジェンダー分析4)勁草書房.
- 宮本みち子(2006). 『人口減少社會の生活像』(財)放送大學教育振興會.
- 守泉理恵(2007). 「先進諸國の出生率をめぐる國際的動向」『海外社會保障研究』 No.160, pp.4-21.
- 永瀬伸子(2004). 「女性勞働と少子化」, 大淵寬・高橋重郷(編)『少子化の人口學』(人口學ライブラリー1)原書房, pp.85-109.
- 佐藤龍三郎(2000). 「人口をめぐる政策と倫理: 「人口政策」論再考」『人口學研究』 第27号, pp.40-43.
- 佐藤龍三郎(2008). 「日本の超少子化」: その原因と政策對應をめぐって『人口學研究』 64-2, pp.10-23.
- 高橋重郷(2004). 「結婚・家族形成の変容と少子化」, 大淵寬・高橋重郷(編)『少子化の人口學』(人口學ライブラリー1)原書房, pp.133-162.
- 堤治(2008). 「自然環境と少子化」『周産期醫學』 第38卷4号, pp.423-426.
- 津谷典子(2005). 「少子化と女性・ジェンダー政策」, 大淵寬・阿藤誠(編)『少子化の政策學』(人口學ライブラリー3)原書房, pp.157-187.
- 和田光平(2004). 「結婚と家族形成の經濟分析」, 大淵寬・高橋重郷(編)『少子化の人口學』人口學ライブラリー1)原書房, pp.65-83.
- 山田昌弘(2004). 『希望格差社會: 「負け組」の絶望感が日本を引き裂く』 筑摩書房.
- Caldwell, JohnC. and ThomasSchindlmayr(2003) "Explanationofthefertilitycrisisinmodernso cieties: Asearchforcommonalities" PopulationStudies, Vol.57 No.3, pp.241-263.

초소자화(超少子化)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본적 방향과 대책

전 광 현(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엔절플랜, 신엘절플랜, 소자화사회대책기본법,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 어린자녀양육지원플랜 등에 의한 일본의 초소자화대책은 여러 가지 정책을 토로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본 짧은 시간에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커다란 방향은 발표자가 언급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인은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행동계획”을 특징과 과제 중심으로 언급을 하려고 한다.

1. 독자의 시책체계의 유무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행동계획’의 책정에 대하여서 그 내용과 관련하여 국가가 제시하는 ‘시책’과 다른 독자의 체계를 갖고 있는 가에 대한 여부는 종래의 소자화대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작금의 ‘지역사회복지’나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부터도 중요한 것이다. 일본의 전국 지사들의 모임이 계획 책정기에 맞추어 조사한 실태조사도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보 조사이자만 독자의 시책체계가 있느냐는 유무에 의하면 ‘있다’ 와 ‘일부 있다’를 합치면 84%에 이르고 있고 36%는 없다고 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99년 후반에 지방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신엘절플랜’의 책정 경험의 유무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국 약 3200개의 시정촌 중 약 1400 군데가 책정을 하고 있어 약 40% 정도의 책정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그 중에 독자성이 있느냐는 결과는 약95%가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지방정부는 어느 정도의 소자화에 대한 국가정책에 지방정부도 보조를 맞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반대로 독자성이 없거나 책정체계를 갖고 있지 못한 지방정부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종래의 보육에 의한 차별이 별로 없다고 하는 지방정부가 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이는 것이다.

2. 특색 있는 ‘행동계획’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한 특색 있는 soddy에 대하여서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료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다. 그 몇 가지를 소개하면, ‘보육원, 유치원의 남성보육사 및 교사의 고용 촉진, 젊은 세대의 자립지원, 매력있는 고용의 창출, 캐리어 형성 지원 세미나를 통한 취업지원, 결혼을 위한 만남의 장의 창출’, ‘남여 공동참가 가정을 만들기 위한 보육원, 유치원, 초중에서의 남녀 평등교육의 철저’ 등등의 계획이 있지만 그것 또한 지역의 실정이나 필요성에 따른 몇 개의 것에 대한 몇 개의 것이라는 것을 주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소자화사회대책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면, 우선 이 대책의 기본 이념은 부모 기타 보육자가 아동 양육에 있어서 일차적인 책임을 갖는다는 인식 하에서 가정 및 기타의 장에서의 양육의 의미의 강조와 더불어 양육에 즐거움을 실감하도록 배려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일련의 정책들이 ‘국민의 의식변화나 생활양식의 다양화의 고려’, 남녀공동참여사회의 형성’, ‘양육 환경의 정비’ 등등을 구현할 수 있는 아동 양육의 지원을 강하게 강조하는 현재의 의미를 그렇게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신엔젤플랜에서는 보육료의 경감,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이 내재되었으나 그후 제시된 사회 대책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그렇게 강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지원이 시정촌 즉 지방정부 독자적인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하였어야 하는 데 추후에 발표된 대책 및 정책에서는 약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부담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서 ‘부담감’, ‘불안감’ 이 되어 이것이 결국 소자화와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점이 부족 되어 있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